

오피니언

다산포럼

선경식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곳에 오는 데 58년이 걸렸다.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은 4월 3일 제주시 봉개동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주 4·3사건 희생자 위령제에 참석했다. 역대 대통령으로서 처음이다.

노대통령은 이날 추도사를 통해 "58년 전 분단과 냉전이 불러온 불행한 역사 속에서 무고하게 희생당한 분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웃음을 띄우며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국가권력이 불법하게 행사되었던 잘못에 대해 제주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노대통령은 지난 2003년 10월에는 "과거 국가권력의 잘못에 대해 유족과 도민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사과를 했다. 또한 노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60주년 경축사에서 "국민에 대한 국가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스스로 앞장 서서 진상을 밝히고 사과하고, 배상

이나 보상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되면 참석해야 할 희생자 위령제나 추도식은 한두건이 아니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 학살

피학살자 유족들의 해원(解冤)위해

은 전국적으로 자행되었기 때문이다. 전국 8개도 32개 지역에 지역별 유족회가 결성된 것이 이를 시사한다. 경남에는 거창유족회와 거제유족회 등 9개, 전남에는 해남군유족회와 보성유족회 등 7개, 제주도는 북부유족회 등 4개, 충북에는 노근리대체위 등 3개가 조직되어 있다. 지역별 유족회는 전국유족협의회라는 연합체를 구성하고 있다.

1950년 7월 22일 전남 보성군 미력면 예제 고갯길에서 20여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마구 던져진 듯 여러 구의 시신이 아무렇게나 포개지고 널부러져 있었다. 눈에 핏발이 박힌 사람, 죽창에 난자당한 사람, 얼어맞아 몸 여기저기가 터져버린 사

람 등이 모두 총에 맞은 상태였다. 그러나 정작 바닥에는 핏자국이 별로 없었다. 이들은 보성경찰서에서 집단으로 학살되어 고갯길에 유기된 것이었다.

전국유족협의회 윤호상 집행위원장은 전하는 보성지역 민간인 집단 학살현장의 모습이다. 다른 지역의 참상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 유족들의 증언이다. "한국전쟁이라는 역사적 비극 속에서 영문도 모른 채 내 부모와 형제들의 목숨을 빼앗겼다"는 희생자 유족들은 2000년 9월 전국유족협의회를 결성했다. 그리고 추방집

회, 여의도 국회와 농성 등을 통해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그 결실이 2005년 5월 여야 합의로 만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다. 같은 해 12월에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국민의 기대 속에 출범했다.

최장 6년의 활동 기간은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다. 금쪽같이 소중한 활용해야 할 시간이다. 그럼에도 진실·화해위의 활동이 너무 더디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팀장급 인선은 최근에야 마쳤고 조사요원 등 실무진에 대한 최종선발은 4월중순쯤 가야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진실 규명 신청을 받고 있는 상

대. 지난 3월 27일까지 2484건이 접수됐다. 이 중 '광복이후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학살 사건'이 1천893건으로 가장 많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직 한건도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다. 진실·화해위의 진상 규명 대상 분야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시급하고 중요한 분야는 아무래도 한국전쟁 전후의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전국유족협의회 윤호상 집행위원장은 조사활동이 지연되고 있는 데 대해 "현재의 인력 180명으로 과연 진상 조사와 진실 규명을 기간 안에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실·화해위에 통신사실 확인 요청권, 고발·수사의뢰권, 청문회 실시권 등이 없는데다 유족들의 진실화해위원회 참여가 불가능하게 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족민주연·희생자 추모기념단체 연대회의도 조사·과거사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진실·화해위원회를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졸속 출범을 규탄했다. 진실·화해위의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천리길도 한걸음부터이며 시작이 반이다. 관계자들은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하루빨리 진상을 규명하고 진실을 밝혀주기 바란다.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정치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외환은 BIS 조작은 국부유출 범죄다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이 론스타 매각 당시인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시인한 것으로 감사원이 주장했다. 검찰도 BIS 비율 조작을 뒷받침할 유력한 단서를 확보하면 서 외환은행 매각의혹사건의 진상이 밝혀질 것인 것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2003년 매각 당시 외환은행이 금감위에 제출한 BIS비율 연말 전망치와 같은 시기 외환은행 이사회에 보고한 전망치가 각각 6.16%와 10.0%로 크게 다르고 그 과정에 조작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어제 "금감원 이도 감사원이 상사의 지시를 받고 BIS 비율을 6.16%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BIS 조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인수 자격이 없는 론스타가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매입한 것이 된다. 매각 무효논란이 거세지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

특히 매각 자문회사 대표와 외환은행 내부 관계자가 거액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매각과정에 실무사인 이들과 검은 돈을 거래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것. 관련 부서 고위 공무원들이 모종의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혹은 철저히 규명되어야 한다. 이강원 전 행장이 퇴직금과 자문료라며 론스타로 부터 받은 17억원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자본·금융계가 주목하고 있다. 외국계 펀드에 대한 차별대우라는 비난이 나올 소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은행은 공적 성격이 강한 국민의 재산이다. 투기성 외국자본과의 뒷거래를 통한 범죄행위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막대한 국부유출을 막을 수 있다. 국내 금융시장 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외환은행을 매입한 것이 된다. 매각 무효논란이 거세지면서 엄청난 후폭풍이 우려된다.

경찰근속승진제, 사기진작 취지 살려야

법 개정 당시부터 말이 많던 경찰관 근속승진제가 끝내 발령을 받고 있다. 근속연수가 6, 7, 8년이 되면 승진, 경찰장, 경사를 각각 잇게됨으로 승진시기 도록 한다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이 지난주 경사 2천700여명을 경위로 승진시켰다는 모양인데, 대상자중 1천200여명은 탈락한데 따른 말썽이다. 경찰청은 심사를 거쳐 승진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탈락자들은 경찰청이 지휘권 강화목적으로 승진인용규정을 만들어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모임을 구성해 서울역에 모여 항의집회를 한다고 버르고있다. 도대체 경찰 사기 올려주자고 고친 법을 어떻게 운용 했길래 되레 하위직 경찰들이 반발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에 부풀었던 경찰들은 반발했고 경찰 12명이 사상 처음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수가 6, 7, 8년이 되면 승진, 경찰장, 경사를 각각 잇게됨으로 승진시기 도록 한다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이 지난주 경사 2천700여명을 경위로 승진시켰다는 모양인데, 대상자중 1천200여명은 탈락한데 따른 말썽이다. 경찰청은 심사를 거쳐 승진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탈락자들은 경찰청이 지휘권 강화목적으로 승진인용규정을 만들어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모임을 구성해 서울역에 모여 항의집회를 한다고 버르고있다. 도대체 경찰 사기 올려주자고 고친 법을 어떻게 운용 했길래 되레 하위직 경찰들이 반발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당시 개정 당시부터 말이 많던 경찰관 근속승진제가 끝내 발령을 받고 있다. 근속연수가 6, 7, 8년이 되면 승진, 경찰장, 경사를 각각 잇게됨으로 승진시기 도록 한다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이 지난주 경사 2천700여명을 경위로 승진시켰다는 모양인데, 대상자중 1천200여명은 탈락한데 따른 말썽이다. 경찰청은 심사를 거쳐 승진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탈락자들은 경찰청이 지휘권 강화목적으로 승진인용규정을 만들어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모임을 구성해 서울역에 모여 항의집회를 한다고 버르고있다. 도대체 경찰 사기 올려주자고 고친 법을 어떻게 운용 했길래 되레 하위직 경찰들이 반발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당시 개정 당시부터 말이 많던 경찰관 근속승진제가 끝내 발령을 받고 있다. 근속연수가 6, 7, 8년이 되면 승진, 경찰장, 경사를 각각 잇게됨으로 승진시기 도록 한다는 개정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경찰청이 지난주 경사 2천700여명을 경위로 승진시켰다는 모양인데, 대상자중 1천200여명은 탈락한데 따른 말썽이다. 경찰청은 심사를 거쳐 승진자를 결정했다고 하는데 탈락자들은 경찰청이 지휘권 강화목적으로 승진인용규정을 만들어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모임을 구성해 서울역에 모여 항의집회를 한다고 버르고있다. 도대체 경찰 사기 올려주자고 고친 법을 어떻게 운용 했길래 되레 하위직 경찰들이 반발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기고

김일용



약국에서 내방한 고객이나 조제한 약을 기다리고 있는 고객에게 제공하는 무료 드링크 제공행위가 도를 넘었다. 일부에서는 다른 약품까지 제공하여 약국간 과다경쟁과 일반의약품 활성화 장애 등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 무상 드링크 제공에 대한 문제점은 몇 년 전부터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이는 약국간의 맞대응으로 이어져 판매와 본인부담금 환인 행위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에 놓여있다. 복지부도 지난 2004년 약국내에서 무상 드링크류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라

적인 캠페인을 통해서라도 뿌리뽑아야 한다. 단 이 캠페인이 성공하려면 근절에 나선 약사회도 형식적인 계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기 살을 도려내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 특히 모든 약국들이 드링크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고객 행위를 일삼고 난매를 치는 일부 문전 약국과 대형약국들 상대로 집중적인 캠페인 활동을 펼쳐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기다리는 환자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도록 커피나 기타 음료 등을 제공하는 방법이 있음에

드링크 제공은 일종의 고객행위

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지만 안타깝게도 유권해석이 나온 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약국에서 무상 드링크 제공은 사라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타 지역에서는 약국에 드링크 무상 제공이 위법이라는 홍보 포스터 덕분에 일부는 제외한 환자들도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약국에게 해를 주면서 까지 공짜 드링크를 마시지 않는 성공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지나고 보면 약국은 물론 이들 고객과 환자에게도 분명 이익이 돌아가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환자라면 일반약이든 건강식품이든 드링크를 함부로 마시게 조정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자체가 약사에게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약사회는 지역 약사들의 자성의 목소리를 인식하여 약사회 차원에서 대대

도 드링크제에 집착하는 형태는 제약사와의 보이지 않는 존속적인 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약사법에도 약국에서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의약품 드링크류를 제공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30일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이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드링크를 제공하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약국가에서는 이에 대해 무감각한 실정이며 사회에서 신뢰도가 떨어져 있는 약사들을 장사꾼으로 인식하게 될 우려가 높다. 약사들은 법적으로도 분명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을 조속히 정리하고 확실적인 지식을 꾸준히 획득하여 복약지도에 힘써야 할 것이다. <광주 시약사 회장>

비양심적인 무더기 투고 사라져야

광주일보를 비롯, 대부분 신문에서 독자 투고 등 독자의 목소리를 담은 란은 고정, 운영되고 있다. 다양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으로 바람직한 일인데, 같은 사람의 독자투고가 타 신문에 동시 게재되는 일이 있는 것 같다. 한 사람이 여러 언론사에 같은 이름으로 다 보낸 탓이다.

또 같은 내용인데도 독자 이름만 바뀌어 신문에 나오는 경우도 봤다. 다른 사람이 개진한 주장을 자신이 한 것으로 바꿔 투고하는 것은 좋은 의견을 내놓기 기회를 사내에 차단해버리기 때문에 독자에게도 피해를 준다. 자신의 양심을 버리는 행위, 더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김태민·광주시 북구 용봉동>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Advertisement for 'Tiger Brand' (호랑이, 표범 발자국 타령?) featuring a tiger logo and a handprint image. Text includes '최고 품질의 약재' and '최고 품질의 약재'.

Advertisement for '독자마당' (독자마당) featuring a tiger logo and text about '휴대폰 판매점 보조금 과잉선전 말아야'.

Advertisement for '무등' (無等鼓) featuring a drum image and text about '장비싸움(?)' (장비싸움(?)).

Advertisement fo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with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